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의 평가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

A Study on the Priority and Evaluation Criteria of Domestic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FTA

손용정(Yong-Jung Son)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 연구조사부 연구원

목 차

I. 서론	IV. 실증분석
II.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의 개요	V. 결론
III. FTA 추진현황 및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 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자유무역협정,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우선순위, 평가기준

I. 서론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에 체결된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체결된 FTA는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2004년 4월 1일)가 발효된 이래 2012년 3월 현재까지 8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2010년 12월 3일 추가협상이 타결되었고, 양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정부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를 홍보하고 있는데, 미국, EU 등과의 FTA를 통해 아시아(아세안, 인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의 확장, 발효 후 10년간 GDP 5.7%증가, 3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특히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시장 접근성 개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민 장바구니의 부담완화 효과, 최근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수출여건 악화, 보호주의 확산 등의 악조건을 극복하는 활력소를 우리경제에 제공할 것으로 FTA체결의 기대효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는 그 동안의 한미동맹을 군사안보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확대하여 한미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 과도한 농산물·서비스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 등을 독소조항으로 간주하여 재협상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에 의한 발효 지연시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기업들의 미국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하여 미국시장에서 다른 FTA 체결국가 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또한 한미간 경제적·전략적 관계에 악영향을 줌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다양한 국내지원대책 중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지원대책의 우선순위(중요도)를 AHP분석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FTA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의 우선순위(중요도)를 측정하여 향후 FTA 국내지원대책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의 개요

1. AHP의 기본개요

1970년대 초반 Pennsylvania대학의 Thomas Saaty 교수에 의하여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판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이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여러 의사결정분야에서 널리 응용되어 왔으며 이론구조 자체에 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

2. AHP의 장단점

AHP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무게 등의 객관적인 지표는 물론 만족도나 선호도와 같은 주관적인 견해에 대한 측정치를 대상으로 AHP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서열화 기법들과 비교하여 AHP의 강점은 대안의 각 속성들을 비교하는데 있으며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선택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계층화 방법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생성 원리의 이론적, 개념적 토대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AHP를 적용하는 과정과 AHP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²⁾

〈표 1〉 AHP의 장점

장점	내용
단위(unity)	비구조화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쉽게 이해되고 적응력이 강한 모델이다.
과정의 반복 (process repetition)	문제의 정의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며, 반복을 통해 판단과 이해를 수정하게 해준다.

1) 조근태·조용근·강현수,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원출판사, 2005, pp.5-12.

2) 김윤주·심준섭, “가중치 추출 기법의 비교: AHP, JA, Swing기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7, pp.19-20.

판단의 합의 (judgement and consensus)	합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판단으로부터의 대표적인 결과를 종합한다.
교환(tradeoffs)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통하여 목표에 근거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해준다.
종합(synthesis)	각 대안의 종합된 최종 수정치를 제공해 준다.
일관성(consistency)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판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복잡성(complexity)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역적 접근 방법과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통합시킨 모델이다.
종속성(interdependence)	시스템의 구성요소들간 종속성 문제를 다룬다. 선형적 사고를 고수하지 않는다.
계층적구성 (hierarchic structuring)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상이한 레벨로 분류하고 각 레벨에 있는 유사요소끼리 그룹핑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사고과정을 반영한다.
측정(measurement)	무형의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준다.

자료: 조근태 · 홍순옥 · 권철신, 『리더를 위한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3, p.26.

Ⅲ. FTA 추진현황 및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12년 3월 현재 우리나라는 8개의 자유무역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을 체결하여 총 4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장기간 지연되어 온 한미 FTA는 양국의 비준절차(미국 측 2011년 10월 12일, 한국 측 2011년 11월 22일)가 완료되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다. 또한 7개의 FTA(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10건(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총 17개국에 대해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발효 (8건, 45개국)	칠레	1999년 12월 협상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EFTA(4개국)	2005년 1월 협상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ASEAN	2005년 2월 협상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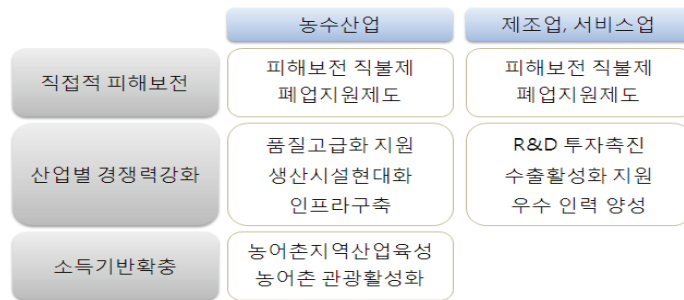
	(10개국)	년 11월 서비스협정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인도	2006년 3월 협상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EU(27개국)	2007년 5월 협상출범, 2009년 7월 협상실질타결, 2009년 10월 가서명, 2010년 10월 서명
	페루	2009년 3월 협상개시, 2010년 8월 협상타결, 2020년 11월 가서명, 2011년 3월 서명, 2011년 8월 발효
	미국	2006년 6월 협상개시, 2007년 6월 협정서명, 2010년 12월 추가협상타결, 2011년 2월 추가협상 합의문 서명, 2012년 3월 15일 발효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개시, 2008년 3월 제13차협상개최
	GCC(6개국)	2007년 11월 사전협의개최, 총 3차례협상개최
	멕시코	2007년 12월 기존의 SF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재개, 2008년 6월 제2차협상개최
	호주	2007년 5월-2008년 4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개최, 5차례 협상개최, 4차례 회기간회의 개최
	뉴질랜드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정부간 예비협의 2차례개최, 총 4차례 협상개최, 2010년 7월 정상회담,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통상장관회담
	콜롬비아	2009년 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5차례협상개최
	터키	2008년 6월-2009년 5월 공동연구, 2010년 1월 국장급협의개최, 총 3차례 협상개최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일본	2003년 12월 협상개시,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중단,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4차례 개최, 동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협의 진행 중
	중국	2007년 5월-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간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사전협의 진행중
	한, 중, 일	2003-2009년 한,중,일 3국간 민간공동연구, 2009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시 공동연구 추진 합의, 6차례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
	MERCOSUR (4개국)	2005년 5월-2006년 12월 정부간 공동연구(2007년 10월 연구보고서 채택), 2009년 7월 무역협정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체결
	이스라엘	2009년 8월 동등연구 개시, 2010년 8월 연구 종료
	베트남	6차례 FTA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몽골	2008년 10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중미(6개국)	2010년 10월 공동연구개시
	말레이시아	2011년 5월 FTA 타당성 연구 개시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연구 회의 개최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new/ftakorea/ftakorea2010.asp>)

2.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기존 대책의 지원규모 22.2조원에서 2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24.1조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산업을 지원하며, 특히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그림 1> 국내지원대책의 기본구조

다음의 <표 3>은 <그림 1>의 국내지원대책의 기본구조에 따른 분야별 주요대책과 세부지원대책을 나타내고 있다. 27개 주요대책에 대한 59개의 세부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FTA체결 확대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은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 4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5개 산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소득기반확충지원은 농업과 어업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였다.

<표 3> 국내지원대책의 주요내용

지원대책	분야	주요대책	세부대책
피해보전	농업인	피해보전 직불금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
		폐업 지원금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
	어업인	피해보전 직불금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종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하여 사후 지원
		폐업 지원금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지원대책	분야	주요대책	세부대책	
	제조업·서비스업 경영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있는 어종을 생산하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용자 및 컨설팅, 정보제공	
		사업전환지원제도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 지원	
			신제품·신기술 개발 사업지원	
	근로자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훈련연장급여 지원	
	경쟁력 강화	농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지원	한우농가에 대한 단계별(사육·도축·유통) 지원대책
			구조·체질개선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위한 지원 강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도입 추진
				경영안정장치 확충 및 규모화 추진
신성장 동력 확충지원		농식품산업 육성		
		중자산업 등 첨단지식·기술산업 육성		
수산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지원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수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어업인 참여에 의한 자원관리 확대	
			수산보전제도 신규 도입	
신성장 동력 확충지원		수산가공, 유통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개발		
제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강화	FTA수혜품목 수출지원확대 및 신규품목 발굴	
			중소기업의 지원 인력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	
		기술개발 촉진	R&D지원 강화	
			기술협력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계약산업		계약인프라 개선	품질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요자 중심의 제도혁신	
		신약개발 역량강화	신약개발 R&D지원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출산업화 위한 지원	의약품 수출지원센터 설치 및 해외인허가 지원		
		해외임상시험 유치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수출·도입 지원체계구축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서비스업	분야별 대책	문화서비스 및 저작권,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전문직서비스		
	경쟁력 강화	관광, 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촉진		

지원대책	분야	주요대책	세부대책		
소득기반확충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지속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혁신 추진		
	농업	농어촌자원 산업화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어촌산업 진흥	
				낙후지역 활성화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도와주는 컨설팅 체계 구축	
		생활여건 개선 및 관광 수요 확대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편 추진
					농촌주택 정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속 추진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 교육 확대 실시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 추진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농촌투자 촉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시행
					도시자본과 농지를 결합한 개발방식을 도입, 농촌투자 유도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 확대
					농촌 이주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 농촌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도시민 농촌유지 프로그램에 신규지원
	어업	어업 외 소득 및 어업 경영기반 확충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적극창출	
어촌의 경관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어업 외 소득창출					
어촌 지역산업 육성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 경영기반을 지속 확충	
				어촌 자연경관의 관광자원화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규모제한 완화	
				FTA로 인한 피해가 큰 어촌지역 투자기업에 투자보조금 운영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	

자료: FTA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http://www.ftahub.go.kr>)

IV. 실증분석

1. 자료분석 및 분석표본

본 연구는 FTA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FTA 국내지원대책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AHP분석을 특성상 수량보다 설문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무역(통상)관련 전공자 5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21일-2012년 1월 3일까지 직접방문, e-mail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평가항목 및 계층설계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그림 2〉 국내지원대책 평가지표의 계층구조

3. 일관성검증

AHP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 요소들의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C.R.값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C.R.값이 0.1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일관성은 특정 기준에 대한 비교대상이 3개 이상일 경우 검증이 가능하며, 비교행렬의 주고유벡터를 활용한 1:1 비교결과의 통합과정에서 비일관성 지수를 도출해 주며,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판단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높일 수 있다. Saaty(1980)는 일관성비율의 값이 0.1이하 이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0.2이하일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으나, 0.2를 초과하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우선순위(중요도)

본 연구와 같이 전문가집단으로부터 구한 설문자료를 가지고 집단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요소들 간의 쌍대비교 결과가 응답자마다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의견을 산술평균하게 되면 극단값의 영향을 받아 평균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AHP에서는 의사결정자 각각이 내리는 판단을 편이 없이 수렴시키고 역수행렬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설문결과응답을 기하평균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5개의 설문 중 일관성이 확보된 3개의 설문응답 결과에 대한 기하평균 값을 구하여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5. 최종분석결과(평가기준의 우선순위)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경영인과 어업인 보다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경쟁력강화 대책은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며, 소득기반확충 대책은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결과에 대한 중요도는 다음의 <표 4>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4〉 국내지원대책의 우선순위 평가결과

지원대책	가중치	분야	가중치	주요대책	가중치	전체항목내 가중치 (전체순위)
피해보전	0.261	농업인	0.552	피해보전 직불금	0.841	0.121(1)
				폐업 지원금	0.159	0.023(14)
		어업인	0.141	피해보전 직불금	0.828	0.030(11)
				폐업 지원금	0.172	0.006(26)
		제조업·서비스업 경영인	0.076	무역조정지원제도	0.419	0.008(25)
				사업전환지원제도	0.581	0.012(23)
근로자	0.231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에 필요한 비용 지원	0.621	0.037(9)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0.379	0.023(15)		
경쟁력 강화	0.423	농업	0.396	품목별 경쟁력 강화지원	0.548	0.092(3)
				구조·체질개선	0.297	0.05(7)
				신성장 동력 확충지원	0.155	0.026(13)
		수산업	0.125	품목별 경쟁력 강화지원	0.546	0.029(12)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0.355	0.019(20)
				신성장 동력 확충지원	0.099	0.005(27)
		제조업	0.234	해외시장 진출지원 강화	0.652	0.065(5)
				기술개발 촉진	0.205	0.02(17)
				외국인 투자유치	0.142	0.014(22)
		제약산업	0.120	제약인프라 개선	0.344	0.017(21)
				신약개발 역량강화	0.445	0.023(16)
				수출산업화 위한 지원	0.211	0.011(24)
서비스업	0.125	분야별 대책	0.623	0.033(10)		
		경쟁력 강화	0.377	0.02(18)		
소득기반확충	0.315	농업	0.791	농어촌자원 산업화	0.249	0.062(6)
				생활여건 개선 및 관광 수요 확대	0.344	0.086(4)
				농촌투자 촉진	0.407	0.101(2)
		어업	0.209	어업 외 소득 및 어업 경영기반 확충	0.703	0.046(8)
				어촌 지역산업 육성	0.297	0.02(19)

V. 결론

본 연구는 향후 지속가능항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FTA 국내지원대책의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FTA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AHP분석을 하였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산업을 지원하며, 특히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경영인과 어업인 보다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경쟁력강화 대책은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며, 소득기반확충 대책은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AHP분석이 많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많은 전문가 또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 계층에 대한 설문조사 및 평가지표의 개발 등의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선광·김종훈, “중, 대만 ECFA 체결이 한, 중 FTA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pp.179-203.
- 김윤주·심준섭, “가중치 추출 기법의 비교: AHP, JA, Swing기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7, pp.5-34.
- 문영수·박복재,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pp.205-234.
- 손용정, “수출보험제도 기능의 우선순위 및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pp.179-196.
-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2011.6.
-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2011.12.
- 조근태·조용곤·강현수,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5.
- 조근태·홍순욱·권철신, 「리더를 위한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2003.
- Herker, P.T. and Vargas, L.G., “The theory of ratio scale estimation: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Vol.33, No.11, 1987, pp.1383-1403.
- Saaty, T.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1980.
- Saaty, T.L., *Decision Making for Leaders*, RWS Publications, 1996.
- Saaty, T.L. and Vargas, L.G., *Model, Methods, Concepts &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 Vargas, L.G., “An overview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ts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48, 1990, pp.2-8.
- Zehedi, 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A survey of the method and its applications,” *Interfaces*, Vol.16, No.4, 1986, pp.96-108.
- <http://www.fta.go.kr>
- <http://www.ftahub.go.kr>

ABSTRACT

A Study on the Priority and Evaluation Criteria of Domestic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FTA

Yong-Jung Son*

To improve support for damages due to FTA and competitive power to overcome it, direct damages to farming and fisheries are compensated through Direct Payment Policy and Business Cessation Support System. Support plans will be developed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industries and income base in rural areas. This study carried an AHP to decide Priority and Evaluation Criteria in respect to domestic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FTA. For the AHP,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direct damage conservation, higher competitive power and expansion of income. For the direct damage preservation measures,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farmers, fishermen, manufactures, service business managers, and workers. In respect to reinforcement of competitive power of each industry,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farming, fisheries, manufacturing, the drug industry, and service business. In respect to expansion of income, the classes were categorized into farming and fishing. Then 27 national support measures were presented for sub-clas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discovered that more weight was given to measures to reinforce competitive power of each industry and expand income than those on direct damage conservation. In respect to higher competitive power in industries, more weight was given to support for farming and manufacturing. In respect to expansion of income, more weight was given on measures on farming than fisheries. For the direct damage preservation measures, more weight was given on support measures on farmers and workers.

Key Words : FTA, AHP, Priority, Evaluation Criteria

* Researcher, Korea Industry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